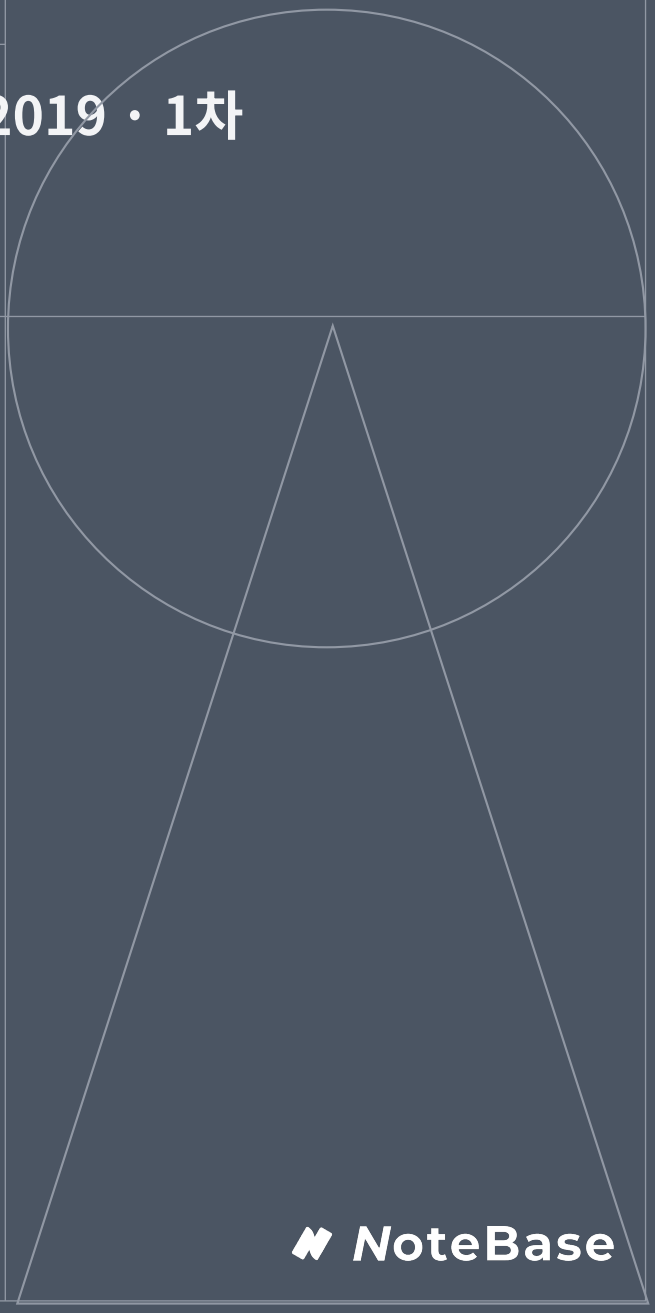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9 · 1차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9 · 1차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9 · 1차**

**문 1. 다음은 법치주의에 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
㉡ 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면 된다.

① ㉠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② ㉡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한다.
③ ㉠은 자연법사상, ㉡은 실정법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④ ㉠, ㉡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법의 제정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식적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통치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법의 형식과 절차를 중시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기본권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은 실질적 법치주의이자 자연법사상에 가깝고, ㉡은 형식적 법치주의이자 실정법사상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까지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과 어긋난다. 틀린 표현은 '㉠은 … 지지한다'이며, 올바르게는 ㉡과 같은 형식적 법치주의·실정법사상이 그 주장에 가깝다.
② O — ㉡은 법이 정해진 절차적 형식에 따라 제정되고 통치도 그 법적 형식에 따르면 된다고 보므로,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③ O — ㉠은 법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법 이상의 정당성 기준을 인정하므로 자연법사상에 가깝고, ㉡은 적법하게 제정된 실정법의 형식적 효력을 중시하므로 실정법사상에 가깝다.
④ O — 두 입장 모두 자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다만 ㉠은 법의 내용적 정당성까지 요구하고, ㉡은 법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악법도 법이다.’를 법 일반에 관한 말이라는 이유로 ㉠과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이 표현은 법의 내용이 정의로운지와 무관하게 제정된 실정법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이 아니라 ㉡에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식에 따라 제정되었는가’만 강조하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여기에 ‘내용의 정의·정당성·기본권 보장’까지 요구하면 실질적 법치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형식적 법치주의는 적법한 형식,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의로운 내용까지 중시한다.

NoteBase

**문 2. ㉠, ㉡에 들어갈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 주택 재개발 지역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지나친 소음과 미세 먼지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에 속하는 환경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를 행사하였다.

① ㉠은 복지 국가와 관련해서 등장한 권리이다.

② ㉡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③ ㉠은 ㉡과 달리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과 ㉡ 모두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례 속 기본권을 사회권과 청구권으로 구분하고, 각 기본권의 성격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권에 속하므로 ㉠은 사회권이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재판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은 청구권이다.

**핵심 개념**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이다.

**적용 기준**

생활 조건의 실질적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면 사회권, 재판이나 청원 등으로 권리 구제를 요구하면 청구권으로 판단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은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국가의 발달과 관련하여 등장한 권리이다.
② X — ㉡인 청구권을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며,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③ X — ㉠인 사회권을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참정권이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이다.
④ X — ㉠과 ㉡을 모두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성격의 권리'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며, 사회권과 청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나 구제를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 오답 포인트

②의 '전제 조건'과 '수단적 권리'를 혼동하기 쉽다. 평등권은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고, 청구권은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서 요구하는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생활 보장을 요구하면 사회권,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 참정권,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면 자유권,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요구하면 청구권에 해당한다.

### 암기 포인트

사회권은 복지 국가의 적극적 생활 보장, 청구권은 기본권 구제의 수단이다.

NoteBase

**문 3.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보석제도는 피의자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④ 보석 제도는 일정한 보증금 납부,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형사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 보석의 대상과 시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구속영장 발부 전의 피의자, 이미 구속된 피의자, 구속된 피고인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구속적부심사 =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이다.
보석 =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 발부 전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14조의2의 구속적부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측의 청구로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한다. 제94조와 제98조에 따른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은 서약서 제출이나 보증금 납입 등 필요하고 상당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구속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틀린 표현: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올바른 표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는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도 하며,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체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②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
틀린 표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보석제도는 피의자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바른 표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③ X
구속된 피의자 측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는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구속적부심사이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심문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틀린 표현: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올바른 표현: 구속적부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측이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④ O
보석은 법원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의 명칭·시점을 서로 바꾼 선지이다. ②는 '피의자만'이라는 표현으로 보석의 대상인 피고인을 피의자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속영장 발부 전이면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면 구속적부심사, 공소 제기 후 구속된 피고인을 조건부로 석방하면 보석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영장실질심사 = 구속 전 피의자, 구속적부심사 = 체포·구속된 피의자, 보석 = 구속된 피고인이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 ㉡이 속한 사회 보장 제도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단, ㉠, ㉡은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에 속한다)**

| | |
|---|---|
| ㉠ 기초연금 제도 |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어르신 (소득 하위 70% 어르신)<br>· 혜택 사항 : 개인별 20,000원부터 204,000원까지 차등 지원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신청 대상 :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br>· 급여 종류 :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br>· 본인 부담금 비율 : 재가 급여(15%), 시설 급여(20%) |

① ㉠이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이 속한 유형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③ ㉠이 속한 유형은 ㉡이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이 속한 유형은 ㉠이 속한 유형과 달리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 기초연금 제도와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각각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두 유형의 재원 부담 방식·가입 원칙·소득 재분배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기초연금 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한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급여를 제공하므로 공공 부조에 속한다.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사후적으로 보호하며, 수급자가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가입자가 사회적 위험에 공동 대응하는 사회 보험에 속한다. 사회 보험은 의무 가입이 원칙이고,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며 필요한 때 보험 급여를 받는다.
핵심 대비는 공공 부조가 조세·선별 지원·무기여를, 사회 보험이 보험료·의무 가입·위험 분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은 공공 부조에 속하므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공공 부조는 빈곤 등 문제가 발생한 뒤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후 구제적 성격이 강하다.
② X — ㉡은 사회 보험에 속하지만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사회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 등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되고, 급여는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가 발생했을 때 제공된다.
③ X —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에만 나타난다는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조세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공 부조뿐 아니라 사회 보험에도 보험료와 급여 구조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O — ㉡인 사회 보험은 법률에 따른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반면 ㉠인 공공 부조는 소득·재산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므로 의무 가입 제도가 아니다.

### 오답 포인트

③의 '㉠과 달리'가 핵심 함정이다. 공공 부조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직접적이라고 해서 사회 보험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②는 보험 급여의 수혜 정도와 보험료 부담 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도 이름보다 재원을 먼저 본다. 조세로 선별 지원하고 수급자의 기여가 없으면 공공 부조,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고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 사회 보험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공공 부조는 조세·선별·사후 구제, 사회 보험은 보험료·의무 가입·위험 분산이다.

NoteBase

**문 5. ㉠~㉣은 범죄의 성립에 관련된 사례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갑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소매치기를 목격하고 쫓아가서 격투 끝에 소매치기를 체포하였다.
㉡ 을은 사나운 개가 달려들자 급하게 옆 집으로 몸을 날려 피하는 바람에 옆 집 창문이 부서졌다.
㉢ 병은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
㉣ 정은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다가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① 갑의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병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병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정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쟁점

이 문제는 범죄의 성립 단계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구별하고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이다.

### 용어 풀이

위법성 조각 = 외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와 같은 정당화 사유가 있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책임 조각 = 위법한 행위는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그 행위를 비난할 수 없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 핵심 구분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현행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제21조의 정당방위, 제22조의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의 상당한 행위는 책임 조각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사례 정리

㉠은 현행범인인 소매치기를 체포한 경우, ㉡은 사나운 개가 야기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다가 타인의 창문을 손괴한 경우, ㉢은 도둑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은 경우, ㉣은 노트북 권리자인 친구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의 허락만 받은 경우이다. 각 사례에서 정당화 사유가 있는지와 그 법적 효과를 나누어 판단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갑은 현행범인인 소매치기를 체포할 수 있고, 체포 과정의 행위가 상당한 범위라면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틀린 표현: '책임성이 조각되어'
올바른 표현: '위법성이 조각되어'

② X
을이 사나운 개로 인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창문을 손괴했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창문 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틀린 표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올바른 표현: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③ O
병이 도둑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X
노트북의 권리자는 친구의 아버지이므로 친구의 허락만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처분한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권리자인 친구 아버지의 승낙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①은 책임 조각이 아니라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고, ②는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이 아니라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다. ④에서는 승낙한 사람이 해당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핀 뒤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책임 조각 사유를 검토한다. 피해자의 승낙에서는 승낙자가 해당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함께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유효한 피해자 승낙은 구성요건이나 책임이 아니라 위법성을 조각한다.

NoteBase

**문 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폭우로 인해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국도에 구덩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방치되었다. 어느 날 운전 중이던 갑이 그 구덩이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이에 관계 당국은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도에 인접한 을의 토지를 수용했다.

<보기>

㉠ 갑은 국가를 상대로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갑은 도로 관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 을의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현물 보상이 원칙이다.

㉣ 을은 토지 수용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손실 보상을 받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과 적법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의 요건,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을 각각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 =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특정인이 특별한 희생을 입었을 때 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한 특별한 재산상 희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한다.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NoteBase

### 보기 판단

㉠ O —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의 구덩이를 수개월 동안 방치하여 사고가 났으므로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잃은 관리상 하자로 볼 수 있다. 갑은 국가에 영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X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은 도로 관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성립하는 책임이 아니다. 틀린 표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올바른 표현: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손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물보상이 아니라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틀린 표현: '현물 보상이 원칙이다.' 올바른 표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 O — 토지 수용은 공공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을에게 특별한 재산상 희생을 주므로 정당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옳은 것은 ㉠과 ㉣의 2개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보기는 ㉠과 ㉣의 2개이므로 '1개'는 틀리다. 올바른 표현은 '2개'이다.
② O — 옳은 보기는 ㉠과 ㉣로 모두 2개이다.
③ X — 옳은 보기는 2개이므로 '3개'는 틀리다. 올바른 표현은 '2개'이다.
④ X — 옳은 보기는 2개이므로 '4개'는 틀리다. 올바른 표현은 '2개'이다.

### 오답 포인트

㉡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과 영조물의 하자 책임을 혼동하게 만든다. 이 사례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보다 도로 자체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은 손실보상의 원칙을 현물보상으로 뒤바꾼 표현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시설의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먼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적법한 토지 수용이 나오면 국가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으로 분류하고, 보상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금인지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도로 하자에는 국가배상, 적법한 수용에는 손실보상, 수용 보상은 현금이 원칙이다.

NoteBase

**문 7. 다음은 근대 초 사회 계약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는 공포가 떠날 사이가 없고, 잔인한 죽음이 인간을 위협한다. 이에 인간은 야수적이고 단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주권을 군주에게 전부 양도하여 국가를 수립한다.

을 :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되어 있으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치공동체에 참여한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나눌 수 없다. 인민은 오직 일반의지에 복종할 뿐이다.

<보기>
㉠ 갑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갑은 인민이 주권의 일부를 군주에게 양도했다고 보았다.
㉢ 을은 대의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보았다.
㉣ 을은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 상태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주권을 세워야 한다고 본 홉스와, 일반의지 및 인민 주권을 강조한 루소의 주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갑은 홉스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투쟁 상태로 보고,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강력한 국가를 수립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권자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을은 루소이다. 루소는 주권이 인민에게 있으며, 주권은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고 일반의지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권은 대표자에게 맡길 수 없으므로 직접 민주 정치와 연결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홉스는 인민이 주권의 일부만 군주에게 양도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국가 수립을 위해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 ㉡의 조합은 틀리며,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② O — ㉠과 ㉣이 모두 옳다. 홉스는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루소는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인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③ X — ㉡과 ㉢이 모두 옳지 않다. ㉡의 '주권의 일부'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로 고쳐야 한다. ㉢의 '대의제'는 루소가 이상적으로 본 '직접 민주 정치'로 고쳐야 한다.
④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루소가 인민 주권을 주장했다는 설명은 맞지만, 홉스는 주권의 일부만이 아니라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한다고 보았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 출제자가 노린 함정

㉡의 '일부'와 ㉢의 '대의제'가 함정이다. 홉스의 강력하고 절대적인 주권은 부분 양도와 맞지 않으며, 루소의 양도 불가능한 인민 주권은 대의제보다 직접 민주 정치와 연결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 상태의 공포·전면적 권리 양도·강력한 주권자가 나오면 홉스, 일반의지·양도 및 분할 불가능한 인민 주권이 나오면 루소로 판단한다. 이어서 홉스는 저항권 부정,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라는 연결을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홉스는 공포에서 절대주권으로, 루소는 일반의지에서 인민 주권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8. 다음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커피 시장의 균형 이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커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

· 커피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노동자의 인건비가 급등하였다.
· 커피의 대체재인 홍차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커피를 매일 1잔 이상씩 마시면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다.

①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②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③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
④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알 수 없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공급 감소: 생산비 상승 등으로 각 가격에서 공급하려는 양이 줄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균형 가격을 올리고 균형 거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이나 해당 재화의 선호 증가로 각 가격에서 수요하려는 양이 늘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모두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문항에서는 인건비 급등이 커피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홍차 가격 급등과 커피의 암 예방 효과 보도는 커피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두 변화 모두 균형 가격을 올리므로 가격은 상승한다. 거래량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변화의 상대적 크기가 없으면 알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가 틀렸다.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는 모두 균형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거래량은 두 효과가 반대이므로 올바르게는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알 수 없음'이다.
② X —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가 틀렸다.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며, 균형 거래량은 수요 증가의 확대 효과와 공급 감소의 축소 효과 중 어느 쪽이 큰지 제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올바르게는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알 수 없음'이다.
③ X — '균형 거래량: 증가'가 틀렸다. 가격 상승은 맞지만, 거래량은 수요 증가가 늘리는 방향이고 공급 감소가 줄이는 방향이므로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균형 거래량: 알 수 없음'이다.
④ O —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는 모두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지만 균형 거래량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알 수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홍차 가격 상승과 건강 정보만 보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거래량 증가를 고르면 ③에 빠진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급 감소도 동시에 반영해야 하며, 거래량은 두 이동의 상대적 크기가 제시되지 않으면 확정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사건을 먼저 수요곡선 이동과 공급곡선 이동으로 나눈 뒤,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방향을 각각 합친다. 두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미치는 변수는 방향을 확정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치는 변수는 이동 폭이 없으면 알 수 없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화 폭에 따라 달라진다.

NoteBase

**문 9.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로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②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와 내각 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③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의 보장으로 정책이 지속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④ 의원내각제의 경우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둔감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권력관계, 임기 보장, 정치적 책임성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립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이다. 권력 상호 간 견제와 정책의 지속성이 장점이지만, 임기 중 정치적 책임을 즉시 묻기 어렵고 의회와 대립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파를 기반으로 내각이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이다.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쉽고 불신임을 통해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확정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의회 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다.
② O —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회와 내각의 정치적 기반이 같아 양자 간 협조가 용이하다.
③ O —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되므로 행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고 정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둔감하다'이다.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유지해야 하고 불신임을 받으면 총사퇴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을 신속하게 물을 수 있으며 국민적 요구에도 비교적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임기 보장'과 ④의 '정치적 책임'을 뒤바꾸기 쉽다. 고정된 임기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쪽은 대통령제이고, 불신임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탄력적으로 묻는 쪽은 의원내각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권력분립·상호견제·고정 임기는 대통령제, 권력융합·의회와 내각의 협조·내각불신임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대통령제는 '분립·견제·고정 임기', 의원내각제는 '융합·협조·책임정치'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표는 갑국의 국제 수지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구분 | 2015년 | | | |
|---|---|---|---|---|
| | 2월 | 3월 | 4월 | 5월 |
| 경상 수지 | 38 | 43 | 57 | 68 |
| 상품 수지 | 19 | 22 | 40 | 52 |
| 서비스 수지 | 22 | 21 | 18 | 20 |
| 본원소득 수지 | 3 | 5 | 6 | 8 |
| 이전소득 수지 | -6 | -5 | -7 | -12 |

① 이 같은 추세는 달러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② 경상 수지 흑자 규모의 확대에는 서비스 수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③ 무상 원조, 국제기구 출연금과 관련된 항목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④ 해외에 특허권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과 관련된 항목은 매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제수지표에서 경상 수지와 각 구성 항목의 증감 및 부호를 읽고, 거래가 어느 수지에 기록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경상 수지의 월별 추세를 확인한다.
2. 상품 수지·서비스 수지·본원소득 수지·이전소득 수지의 2월과 5월 수치를 비교한다.
3. 각 선지의 거래가 표에 제시된 경상 수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핵심 근거**

경상 수지는 2월 38에서 5월 68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상품 수지는 19에서 52로 33 증가하고, 서비스 수지는 22에서 20으로 2 감소한다. 이전소득 수지는 2월 -6, 3월 -5, 4월 -7, 5월 -12로 매월 적자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경상 수지 흑자가 38에서 68로 확대되는 추세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공급을 늘려 일반적으로 달러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의 상승 요인이 된다. 틀린 표현 '갑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은 '갑국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2월부터 5월까지 상품 수지는 19에서 52로 33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지는 22에서 20으로 2 감소했다. 경상 수지 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서비스 수지가 아니라 상품 수지이다. 틀린 표현 '서비스 수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상품 수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무상 원조와 국제기구 출연금은 대가 없이 이전되는 거래이므로 이전소득 수지에 기록된다. 표의 이전소득 수지는 -6, -5, -7, -12로 모든 달에 음수이므로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④ X — 특허권 매각 대금은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자본 수지에 기록된다. 제시된 표는 경상 수지와 그 구성 항목만 보여 주므로 자본 수지가 매월 흑자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매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 표만으로는 월별 흑자 여부를 알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②는 서비스 수지의 수치가 계속 양수라는 점과 경상 수지 흑자 확대에 대한 기여도를 혼동하게 한다. 기여도는 수지의 수준이 아니라 기간 중 변화량으로 판단한다. ④는 특허권 매각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로 오인하게 하지만, 이는 자본 수지 항목이므로 제시된 표 밖의 거래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수지표 문제에서는 먼저 각 행의 부호와 처음·마지막 수치의 변화량을 비교한다. 이어 무상 이전은 이전소득 수지, 특허권 등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처분은 자본 수지로 분류하여 표가 실제로 제공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무상 이전은 이전소득 수지, 특허권 매각은 자본 수지, 흑자 확대의 기여도는 변화량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갑이 운영하는 분식점의 월세는 400만원, 종업원 월급은 300만원, 재료비 등 기타 비용이 한 달에 600만원이다. 갑이 한식당에 취업하였을 경우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분식점에서 얻는 갑의 월수입은 1,600만원이다. 갑은 분식점 운영을 계속할지 한식당에 취업할지 고민 중이다.

① ㉠은 분식점 운영 선택에 대한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② 갑이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③ 갑이 분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300만원이다.

④ 갑의 분식점 운영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100만원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구분하여 기회비용과 경제적 이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분식점의 명시적 비용은 월세 400만원, 종업원 월급 300만원, 기타 비용 600만원이다.
분식점 운영으로 포기하는 한식당 임금 200만원은 암묵적 비용이다.
분식점의 월수입은 1,600만원이다.

**사용할 공식**

명시적 비용=400+300+600=1,300만원
기회비용=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1,300+200=1,500만원
경제적 이윤=수입-기회비용=1,600-1,500=100만원
기회비용은 선택 때문에 실제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대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인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명시적 비용을 합하면 1,300만원이다.
2. 포기한 한식당 임금 200만원을 더하면 분식점 운영의 기회비용은 1,500만원이다.
3. 월수입 1,600만원에서 기회비용 1,500만원을 빼면 경제적 이윤은 100만원이다. 경제적 이윤이 양수이므로 주어진 두 대안 중 분식점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한식당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월 200만원은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포기한 소득이므로 암묵적 비용이다.
② O — 분식점 운영의 경제적 이윤이 100만원으로 양수이므로 한식당 취업보다 분식점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X — '기회비용은 1,300만원'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1,300만원은 명시적 비용일 뿐이며, 암묵적 비용 200만원까지 포함한 기회비용은 1,500만원이다.
④ O —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1,6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100만원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명시적 비용 1,300만원을 기회비용으로 착각하게 하는 선지이다. 기회비용에는 실제 지출뿐 아니라 선택으로 포기한 한식당 임금 200만원도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지출액을 합해 명시적 비용을 구하고, 포기한 최선의 대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암묵적 비용으로 더한다. 그 기회비용을 수입에서 빼 경제적 이윤의 부호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고, 경제적 이윤은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 과학 연구 방법에 적합한 연구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연구 방법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이 연구 방법에 따르면 사회적 사실은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외부적 속성에 의해 정의된다.

① 초임 교사의 학교 문화 적응 과정

②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비교 연구

③ 무감독 시험과 학생 자존감 간의 상관 관계 연구

④ 학생의 가정 특성과 학업 성취도 간의 인과 모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실증적 자료로 사회 현상을 측정하고 변인 간 관계나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와, 행위자의 경험과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질적 연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적 연구는 사회 현상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꾸어 수치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이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객관적 관찰, 측정, 변수 간 비교·상관·인과 관계가 핵심어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과 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다. 과정, 의미,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핵심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초임 교사의 학교 문화 적응 과정'은 교사가 적응하면서 겪는 경험과 의미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주제로서 질적 연구에 더 적합하다. 틀린 부분은 '적응 과정'을 지문의 양적 연구에 적합한 사례로 본 점이다. 양적 연구에 맞게 고치면 '초임 교사의 학교 문화 적응 정도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된다.
② O — 성별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수치로 측정·비교하므로 양적 연구에 적합하다.
③ O — 무감독 시험과 학생 자존감을 각각 측정 가능한 변수로 설정하고 두 변수의 상관 관계를 검증하므로 양적 연구에 적합하다.
④ O — 가정 특성과 학업 성취도를 변수로 설정하고 두 변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모형으로 검증하므로 양적 연구에 적합하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①의 '과정'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조사한다는 뜻으로 보면 양적 연구로 오해하기 쉽다. 이 선택지는 초임 교사가 학교 문화에 적응하는 경험과 맥락을 탐색하는 데 초점이 있다. 반면 ②의 비교, ③의 상관 관계, ④의 인과 모형은 모두 변수를 측정하여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 제목에서 측정 가능한 변수와 비교·상관·인과 검증이 드러나면 양적 연구로 판단한다. 경험의 의미, 적응 과정, 맥락에 대한 심층 이해가 중심이면 질적 연구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양적 연구는 측정·비교·상관·인과 검증, 질적 연구는 경험·과정·의미·맥락의 이해이다.

NoteBase

**문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태안해양경찰서 122구조대에 근무하는 경위 "甲"은 근무 중 낚싯배가 전복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긴급히 출동하여 뒤집어진 선박 내에 갇혀 있던 ㉡ ○○회사 내 낚시 동호회 회원 "乙"과 "丙"을 구했다. "甲"은 이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 1계급 특진과 ㉣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① ㉠은 공동 사회, ㉡은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② ㉠은 공식 조직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비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이다.

④ ㉢과 ㉣은 甲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집단의 결합 의지, 공식·비공식 조직, 사회화 기관, 지위와 역할 행동의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동 사회는 가족·촌락처럼 본질 의지에 따라 자연적으로 결합한 집단이고, 이익 사회는 회사·정당처럼 특정 목적을 이루려는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결합한 집단이다.
공식 조직은 정해진 목표와 규범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며,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친밀감이나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역할 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지위에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 수행 결과에는 보상이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 태안해양경찰서 122구조대는 구조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므로 이익 사회이다. ㉡ 회사 내 낚시 동호회도 공통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므로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은 공동 사회'이며, 올바르게는 '㉠은 이익 사회'이다.
② O — ㉠은 명확한 목표와 체계를 갖춘 공식 조직이다. 또한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지만 근무 과정에서 구성원에게 규범과 행동 양식을 습득시키므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O — ㉡은 회사라는 공식 조직 안에서 공통 취미를 가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공식 조직이며, 가입 의사에 따라 결성되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④ O — 구조대원이라는 甲의 지위에 기대되는 구조 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것이 역할 행동이다. ㉢ 1계급 특진과 ㉣ 해양경찰청장 표창은 그 역할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주어진 보상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이 공공기관 소속이고 사람을 구조한다는 점만 보고 공동 사회로 판단하기 쉽다.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는 공익성 여부가 아니라 자연적·본질적 결합인지, 특정 목적을 위한 선택적·인위적 결합인지로 구분한다. 또한 공식 조직 여부와 사회화 기관의 공식성 여부는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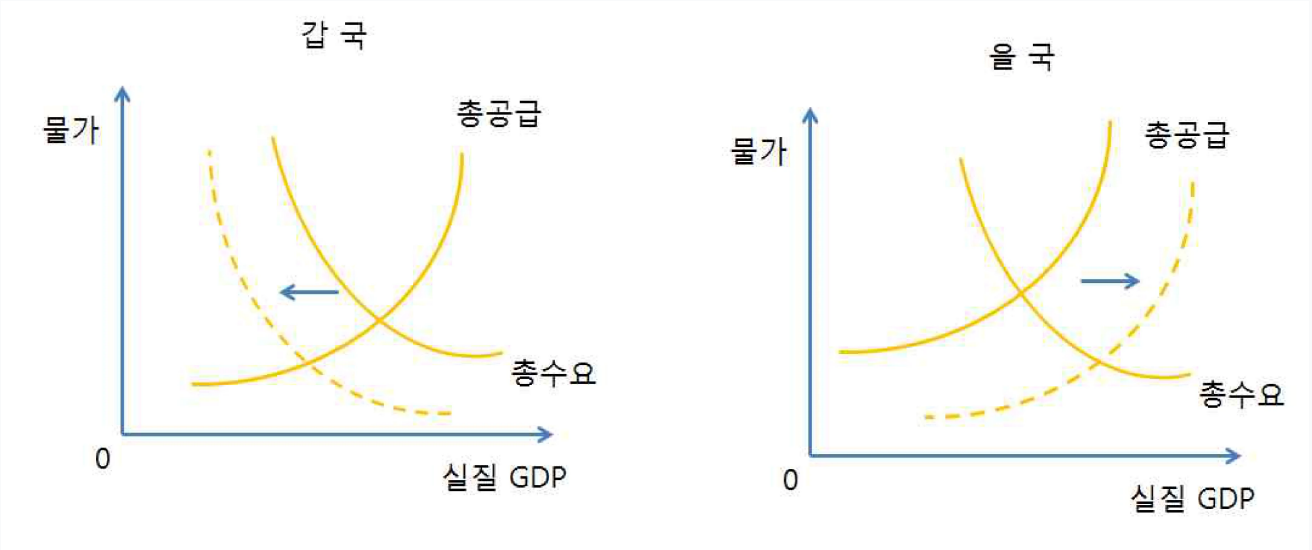
집단의 결합 방식은 본질 의지인지 선택 의지인지, 조직의 형태는 공식적인 목표·규범이 있는지, 사회화 기관의 성격은 사회화가 설립의 주목적인지를 각각 따로 판단한다.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을 실제로 수행한 뒤 받은 긍정적 평가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

### 암기 포인트

자연적 결합은 공동 사회, 목적을 위한 선택적 결합은 이익 사회이다. 공식 조직·비공식 조직과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분류 기준이 다르다.

NoteBase

**문 14. 다음 그래프는 서로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갑국과 을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수요·총공급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화살표는 경제 정책 실시 이후의 총수요·총공급 곡선의 이동 방향을 나타냄.

① 긴축 재정 정책은 갑국보다는 을국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다.

② 을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

③ 갑국의 인플레이션은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것이다.

④ 갑국은 생산 요소의 절약 및 경영의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물가-실질 GDP 그래프에서 정책 이후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동 방향을 읽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처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물가, 가로축은 실질 GDP임을 확인한다.
2. 갑국에서는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을국에서는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을 확인한다.
3. 총수요 억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처방이고, 총공급 확대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처방이라는 점과 연결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갑국 그래프의 왼쪽 화살표는 총수요 감소 정책을 뜻하므로 긴축 재정·통화 정책과 연결된다. 을국 그래프의 오른쪽 화살표는 총공급 확대 정책을 뜻하므로 생산비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과 연결된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산출량 감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그래프에서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국가는 갑국이다. '갑국보다는 을국에서'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긴축 재정 정책이 을국보다는 갑국에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 O — 을국은 총공급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GDP가 줄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③ X —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은 생산비를 높여 총공급을 감소시키는 비용 인상 요인이다. 갑국 그래프는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나타내므로 '갑국'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국제 원유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은 을국이 대응하는 형태의 인플레이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X — 생산 요소 절약과 경영 효율성 증대는 생산비를 낮추고 총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갑국'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이러한 방법이 총공급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을국의 정책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화살표가 가리키는 곡선을 바꾸어 읽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갑국은 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의 좌측 이동이고, 을국은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의 우측 이동이다. 특히 ③의 원유 가격 상승과 ④의 효율성 증대는 모두 총공급 요인이므로 갑국이 아니라 을국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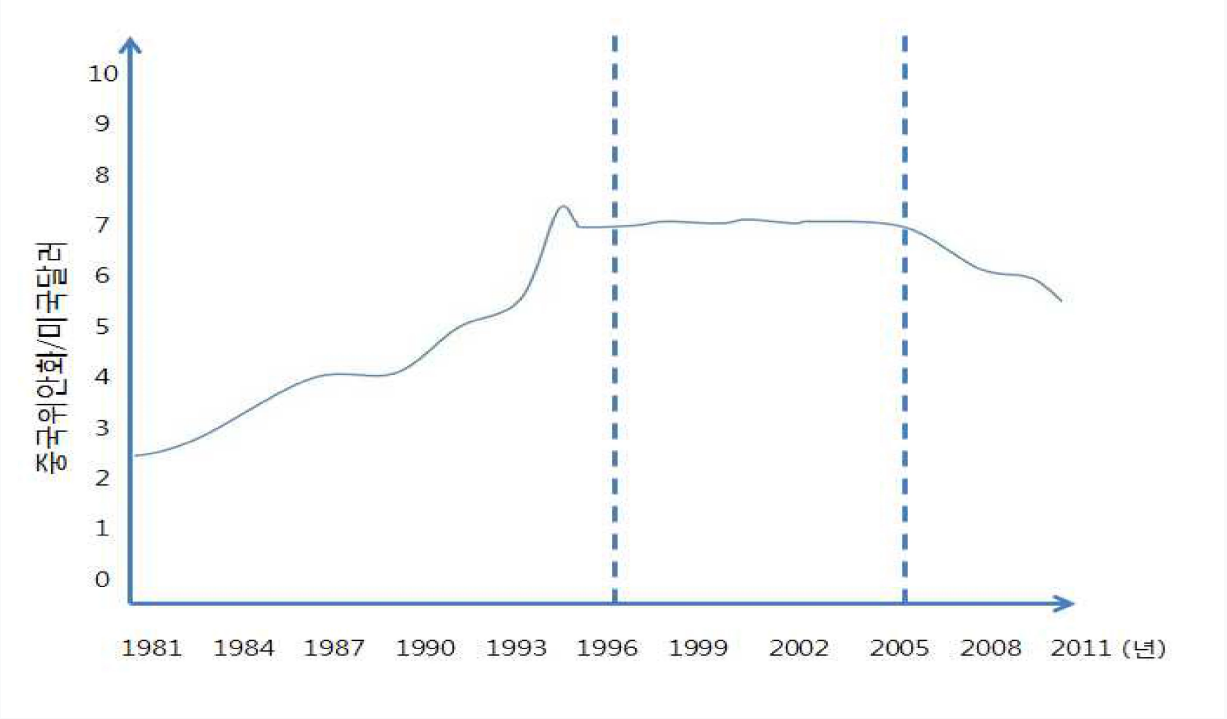
총수요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긴축 정책에 의한 수요 억제로 판단한다. 총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생산비 절감·생산성 향상에 의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판단한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가 상승과 산출량 감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 견인에는 총수요 억제, 비용 인상에는 총공급 확대이며, 비용 인상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함께 부를 수 있다.

NoteBase

**문 15. 다음 그래프는 중국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1996년~2005년 당시 중국의 환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역의 흑자나 적자의 해소를 위해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될 수 있다.

② 약 10년간 환율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변동 환율 제도에 가깝다.

③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결정으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④ 미국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동 조절되는 고정 환율 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위안화/미국 달러 환율이 거의 일정하다는 그래프를 통해 당시 중국이 사실상 고정 환율 제도를 운용했음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이 중국 위안화/미국 달러의 환율임을 확인한다.
2.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그래프가 거의 수평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3. 환율이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된 모습과 고정 환율 제도의 특징을 연결한다.

NoteBase

### 핵심 근거

그래프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환율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는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환율을 맡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 수준으로 관리한 고정 환율 제도에 가깝다는 뜻이다. 정부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수출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이 생길 수 있다.

### 선지별 해설

① X —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그래프가 거의 수평이므로 환율이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고정 환율 제도에 가깝다.
② X — 약 10년간 환율이 일정하다는 것은 변동 환율 제도가 아니라 고정 환율 제도의 특징이다. 틀린 표현은 '변동 환율 제도에 가깝다'이며, 올바르게는 '고정 환율 제도에 가깝다'이다.
③ O — 그래프의 장기간 고정된 환율은 중국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했음을 보여 준다.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여 수출에 유리한 효과가 나타나면 미국과의 무역 마찰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④ X —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제도는 고정 환율 제도가 아니라 변동 환율 제도이다. 틀린 표현은 '고정 환율 제도'이며, 올바르게는 미국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더 반영되는 변동 환율 제도로의 전환이나 위안화 가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의 특징을 서로 뒤바꾼 선지이다. 특히 '환율이 일정하다'는 현상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동 조절된다'는 원리를 구분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율 그래프가 장기간 거의 수평이면 정부가 일정 환율을 유지하는 고정 환율 제도로 판단한다. 환율이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면 변동 환율 제도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환율이 일정하면 고정 환율,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면 변동 환율이다.

NoteBase

**문 16. ㉠, ㉡은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질문 항목 | 답변 | |
|---|---|---|
| | ㉠ | ㉡ |
| 차등적인 보상이 사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가? | 아니요 | 예 |
|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이 불공정하다고 보는가? | 예 | 아니오 |
| (가) | 예 | 아니오 |

① ㉠과 달리 ㉡은 사회 불평등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② ㉠과 달리 ㉡은 균등 분배는 사회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저해한다고 본다.

③ ㉡과 달리 ㉠은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④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사회 계층화 현상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가?'가 적절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 계층화를 설명하는 갈등론과 기능론을 구별하고, 표의 응답으로 두 관점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은 갈등론이다. 갈등론은 사회 계층화를 지배 집단이 희소가치를 불공정하게 배분한 결과로 보고, 차등 보상이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은 기능론이다. 기능론은 중요한 역할에 유능한 사람을 배치하려면 차등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 계층화의 불가피성과 긍정적 기능을 강조한다.
핵심 대비는 갈등론은 불평등의 극복과 불공정성을 강조하고, 기능론은 차등 보상의 필요성과 성취 동기 유발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과 달리 ㉡은 사회 불평등을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이다. 사회 불평등을 극복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인 기능론이 아니라 ㉠인 갈등론이다.
② O — 기능론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이 성취 동기와 인재 선발에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능론은 획일적인 균등 분배가 사회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과 달리 ㉠은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이다. 사회 계층화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관점은 ㉠인 갈등론이 아니라 ㉡인 기능론이다.
④ X — '사회 계층화 현상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가?'에 갈등론은 '아니요', 기능론은 '예'라고 답한다. 표의 (가)는 ㉠이 '예', ㉡이 '아니요'라고 답하는 질문이어야 하므로 제시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올바른 질문의 예는 '사회 계층화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고 보는가?'이다.

###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갈등론과 기능론의 특징을 서로 뒤바꾼 선지이다. ④는 질문 자체의 내용만 판단하면 안 되고, 표에 표시된 ㉠ '예'와 ㉡ '아니요'의 방향까지 대조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등 보상이 필요하다', '성취 동기를 높인다', '계층화는 불가피하다',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기능론으로 판단한다. '희소가치 배분이 불공정하다', '불평등은 극복 대상이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표 문제에서는 각 질문의 실제 답변이 제시된 예·아니요 배열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차등 보상·동기·불가피성, 갈등론은 불공정 배분·지배·극복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 행동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뒤르켐은 저서 「자살론」에서 '아노미'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자살의 유형 중에서 갑작스러운 경제 호황이나 불황의 시기에 사회 규범이 개인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여 현실에 대한 좌절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살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하였다.

① 일탈 행동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이 반복된다고 본다.

② 무규범 상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③ 일탈 행동의 원인을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의 습득이라고 본다.

④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진 무규범 상태가 일탈을 낳는다고 본다.
낙인 이론: 타인의 부정적 규정과 낙인이 부정적 자아 정체성과 이차적 일탈을 형성한다고 본다.
차별 교제 이론: 일탈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법 위반에 우호적인 가치와 기술을 학습한다고 본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사회가 강조하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합법적·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일탈을 낳는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이 반복된다'는 설명은 낙인 이론에 해당한다. 뒤르켐의 관점에 맞게 고치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진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해야 한다.
② O — 뒤르켐은 갑작스러운 경제 호황이나 불황처럼 사회가 급변할 때 규범이 개인의 욕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아노미, 즉 무규범 상태가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③ X —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의 습득'은 차별 교제 이론의 설명이다. 뒤르켐의 관점에 맞게 고치면, 사회 규범의 약화로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고 해야 한다.
④ X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한다. 뒤르켐의 관점에 맞게 고치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 규범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이 비롯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도 '아노미'를 설명하므로 ②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뒤르켐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규범 통제의 약화에 주목하고,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 주목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급격한 사회 변동·규범 약화·무규범’이면 뒤르켐, ‘목표와 수단의 괴리’이면 머튼, ‘낙인과 부정적 자아’이면 낙인 이론, ‘일탈 가치의 학습’이면 차별 교제 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뒤르켐은 규범 약화, 머튼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원인: _____㉠_____
- 결과: A재의 수요는 증가하고, B재의 수요는 감소하였다.

① A재와 B재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② A재의 대체재인 B재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낮아졌다.

③ B재의 보완재인 A재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높아졌다.

④ 정상재인 A재와 열등재인 B재를 소비하는 수요자의 소득 수준이 하락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체재·보완재 관계, 소비자 선호, 소득 변화가 각 재화의 수요에 미치는 방향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주어진 결과는 A재의 수요 증가와 B재의 수요 감소이다. 따라서 두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핵심 개념**

대체재는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므로 한 재화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면 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고 다른 재화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보완재는 함께 소비하는 재화이므로 한 재화의 수요가 늘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재의 수요는 감소하고 열등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적용 기준**

각 선지의 원인이 A재 수요 증가와 B재 수요 감소를 동시에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가격 변화는 해당 재화의 수요곡선 자체가 아니라 수요량을 변화시킨다는 점도 구분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A재와 B재의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각 재화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특히 A재 가격 상승으로 A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인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A재 수요 증가와 B재 수요 감소를 함께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대체재인 B재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낮아졌다고 해야 한다.
② O. B재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낮아지면 B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A재는 B재의 대체재이므로 소비가 A재로 이동하여 A재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주어진 두 결과를 모두 설명한다.
③ X. A재와 B재가 보완재라면 A재에 대한 소비 선호도의 상승은 A재의 수요를 늘리고 함께 소비되는 B재의 수요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B재의 수요는 감소하였다'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B재가 A재의 대체재이고 B재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낮아졌다고 해야 한다.
④ X. 소득이 하락하면 정상재인 A재의 수요는 감소하고 열등재인 B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는 제시된 결과와 정반대이다. 틀린 표현인 '소득 수준이 하락하였다'는 올바르게는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 정상재 A재의 수요는 증가하고 열등재 B재의 수요는 감소한다고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③은 A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앞부분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보완재인 B재의 수요까지 함께 증가하므로 결과의 후반부와 충돌한다. ④는 정상재와 열등재의 소득 효과 방향을 반대로 떠올리기 쉬운 선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원인이 A재와 B재 각각의 수요를 어느 방향으로 바꾸는지 따로 표시한 뒤, 두 방향이 제시된 결과와 모두 일치하는 선지만 고른다. 대체재는 서로 반대 방향, 보완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를 우선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대체재는 한쪽 선호 하락 시 다른 쪽 수요 증가, 소득 하락 시 정상재 수요 감소·열등재 수요 증가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 ㉡ 지역구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선거구 제도에 따라 정당 간 세력 관계, 즉 정당 체계가 다르게 형성된다. ㉠제도는 대표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수 정당에게도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그 권익을 보호하며 집권당에 대한 견제를 용이하게 한다. 한편, ㉡제도는 정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가장 큰 정당의 의석을 극대화하여 입법을 포함한 국정의 효율성이나 집권당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① ㉠제도는 ㉡제도에 비해 사표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

② 현행 우리나라 기초 지방 의회 지역구 선거는 ㉠제도에 해당한다.

③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④ 일반적으로 ㉠제도에 비해 ㉡제도에서 선거구의 크기가 크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중·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소수 세력의 의석 진출에 유리하고 사표가 비교적 적지만 정당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최다 득표자만 당선되므로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정당 체계의 단순화에 기여하지만 사표가 비교적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므로 기초 지방 의회 지역구 선거는 ㉠에 해당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제도는 ㉡제도에 비해 사표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이다. 여러 명을 선출하는 ㉠에서는 소수 득표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표가 비교적 적다. 올바르게는 '㉡ 소선거구제는 ㉠ 중·대선거구제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이다.
② O —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므로 ㉠ 중·대선거구제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이다. ㉡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마다 당선자가 1명이므로 같은 선거구의 당선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 ㉠ 중·대선거구제에서 당선자 간 득표수 차이에 따른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제도에서 선거구의 크기가 크다'이다. 여기서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자 수를 뜻하므로 여러 명을 뽑는 ㉠이 1명을 뽑는 ㉡보다 크다. 올바르게는 '일반적으로 ㉡제도보다 ㉠제도에서 선거구의 크기가 크다'이다.

### 오답 포인트

①은 사표 발생 방향을 반대로 제시했고, ③은 복수 당선자를 전제로 하는 문제를 소선거구제의 특징으로 바꾸었으며, ④는 '선거구의 크기'를 지리적 면적이 아니라 선출 인원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노린 선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선거구의 선출 인원을 먼저 확인한다. 여러 명이면 중·대선거구제로서 소수 세력의 대표성과 사표 감소를 연결하고, 1명이면 소선거구제로서 거대 정당의 의석 확대와 사표 증가를 연결한다.

### 암기 포인트

중·대선거구는 여러 명·소수 대표·사표 감소, 소선거구는 한 명·거대 정당·사표 증가이다.

NoteBase

**문 20. 밑줄 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7~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불황에 빠졌으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double-dip)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준비 제도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펴왔다.

① 이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

② 이는 재할인율 인하와 같은 취지의 정책이다.

③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이 정책에 포함된다.

④ 이 정책으로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양적 완화가 통화량, 이자율,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전통적 통화 완화 정책과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적 완화는 기준금리가 매우 낮아 추가 인하가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국채 등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 완화 정책이다. 자산 매입은 채권 가격을 높이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통화 공급 확대는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 요인이 된다. 재할인율 인하는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 비용을 낮추는 전통적 통화 완화 정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양적 완화는 이자율을 낮추려는 정책이며, 물가 상승 기대까지 커지면 실질 이자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이다. 과도한 양적 완화의 부작용은 물가 상승이나 자산 가격 거품 등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재할인율 인하는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통화 공급과 대출을 늘리므로, 양적 완화와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 정책이다.

③ O —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시중에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장기 이자율을 낮추려는 양적 완화의 대표적 수단이다.

④ O — 양적 완화로 달러 공급이 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변할 수 있다. 달러 가치 하락은 달러로 살 수 있는 외국 상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달러의 대외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①은 '정책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일반론을 이용해 실질 이자율도 상승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통화 완화는 명목 이자율을 낮추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 실질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은 통화 공급 증가 → 채권 가격 상승 → 이자율 하락 → 투자·소비 증가의 순서로 판단한다. 이어 통화 공급 증가가 자국 통화 가치와 대외 구매력을 낮추는 방향인지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양적 완화는 '국채 매입·유동성 확대·이자율 하락·통화 가치 하락'으로 연결된다.

NoteBase